



미국 : 앨라배마주에서 아마존 노동조합 대표권 투표 진행

그간 노동조합 불모지였던 미국 2위 규모 고용 기업인 아마존에서 최근 노동조합 조직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앨라배마주 베서머(Bessemer)에 위치한 아마존 창고(Amazon Warehouse)에서 일하는 5,800여 명의 노동자는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소매·도매·백화점 노동조합(RWDSU)에 대한 배타적 대표권 승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 투표에서 RWDSU가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경우 아마존에 최초로 배타적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이 등장하게 된다.

뉴욕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¹⁾ 이 투표는 연예계나 스포츠 스타들의 지원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기업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공정하게 노조 가입을 선택해야 한다”며 간접적인 지지 성명을 보냈다. 노조 대표자 투표는 베서머 창고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전국의 아마존 노동자와 저임금 및 유색인종 노동계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동계와 아마존 기업 간의 전국 단위 대결로 확산되고 있다.

아마존의 노조 반대 캠페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마존 대변인 히더 녹스(Heather Knox)는 “우리는 그들(노동자)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거 과정 등에 관련된 교육을 제공할 것이며, 관련 노동자들은 노조 투표 통과

가 갖는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며 자신들의 반대 캠페인을 정당화했다. 사측은 노조와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는 한편, 내부 회사 앱에는 아마존에 애정을 표현하는 베서머 노동자들의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소매·도매·백화점 노동조합(RWDSU) 대표인 스투어트 아펠바움(Stuart Appelbaum)은 아마존 측이 창고 근처 도로의 신호 타이밍까지 통제함으로써, 창고 외부에서 노동자들과 대화하려는 노조활동가들의 시도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친노조 창고 노동자인 제니퍼 배츠(Jennifer Bates)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년 거의 500달러(한화 약 56만 원)에 달하는 노조비를 내야 한다고 홍보했다는 점(실제로 앨라배마주는 단결강제금지법(Right-to-work Act)을 시행하고 있어 노조비 납부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지적하며 아마존의 반노조 노력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 벤자민 사흐(Benjamin Sachs)는 현행 노동법이 아마존에 노조 반대 캠페인 관련 회의 개최 및 메시지 게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지역의 아마존 창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권 투표는 이제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 갈등 양상은 더 격렬해지고 있다. 이 투표 결과가 다른 아마존 창고뿐 아니라 관련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1) New York Times(2021.3.2), “Amazon workers’ union drive reaches far beyond Alabama,” Retrieved on Mar.2.2021, <https://www.nytimes.com/2021/03/02/business/amazon-union-bessemer-alabama.html>



미국 : 바이든, 노조 대표들과 만나 현안 논의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2021년 2월 17일 노동조합 대표들과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는가 하면 노조 조직화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노동계 인사들을 내각에 포함할 구상을 밝히는 등 친노동 행보를 보여온 바 있다. 이번 만남은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로이터 통신 기사에 따르면,¹⁾ 이 회의에는 미국 노동총동맹 산별회의(AFL-CIO), 북미건설노동조합(North America's Building Trades Union), 국제전력노동조합(The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등 전국 단위 노동조합 대표 10명이 포함되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천억 달러(약 2,130조 원)의 코로나19 구제계획 및 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공유하며, 이것이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계획은 현재 미국의 도로와 다리 등 기반시설이 매우 낙후되었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며, 기반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인프라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²⁾ 회의 이후 노조 대표들은 대체로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 중 일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많은 노조원의 일자리를 희생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고 한다. 특히 회의에 참석했던 노조 대표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³⁾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1만 개의 노조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문제 역시 경감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환경문제를 이유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에너지 정책이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루어졌다고 한다.

약간의 이해 충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노동조합 간의 유대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노동조합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19 상황 해결 의지와 인프라의 현대화 및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세에 힘입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압박하여 공약을 이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1) Reuters(2021.2.18), "Biden discusses COVID relief and infrastructure with top labor leaders," Retrieved on Feb.24.2021,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biden/biden-discusses-covid-relief-and-infrastructure-with-top-labor-leaders-idUSKBN2AH2F9>
- 2) The Wall Street Journal(2021.2.18), "Biden, Union leaders huddle on infrastructure plan," Retrieved on Feb.25.2021, <https://www.wsj.com/articles/biden-union-leaders-huddle-on-infrastructure-plan-11613603680>
- 3)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 텍사스주까지 빠르게 원유를 수송하기 위한 송유관을 만드는 프로젝트.

미국 : 1.9조 달러 경기부양책 상원 통과,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제외

2021년 2월 말,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하에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¹⁾했던,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포함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외된 수정안으로 3월 7일 상원을 통과했다. 민주당에서는 예산조정 절차를 발동하여 단순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부양책을 가결하고자 했으나,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 일부 중도파들도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에 쟁점이 된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에 대해서 상원 사무처에서 최저임금은 예산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발표하면서 해당 법안이 제외된 수정안이 단순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원을 통과한 것이다.²⁾

수정된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금 지원 :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개인과 부부합산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인 가구에 1인당 1,400달러(피부양자 포함)의 현금을 지급한다. 소득이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금 액수는 감소하며 연소득 8만 달러 이상인 개인과 연소득 16만 달러 이상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실업급여 : 2021년 9월 초까지 연방정부가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며, 부

부합산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인 가구의 경우 2020년에 수급한 실업급여 1만 200달러에 대해서는 연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세액공제 : 2021년 자녀세액공제(기존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를 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3,600달러, 6~17세 자녀의 경우 3,000달러로 확대한다. 그 외에도 2자녀 및 피부양자 세액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확대되며, 학자금대출감면에 대한 소득세는 2025년까지 감면된다.
- 코로나19 대응 주정부, 지방정부 및 학교 지원 : 백신 접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확진자 동선 파악, 변이 바이러스 발견을 위한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 파악에도 재정을 지원하며,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3,500억 달러, 학교에 1,300억 달러를 지원한다.
- 「건강보험개혁법(ACA)」 부활 : 2년간 해당 법안에 따른 의료보험 상품 가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중상층으로까지 확대하며, 2021년 9월까지 신규 실업자들이 기존 고용주가 제공하던 민간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보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하원의 표결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후 발효된다.³⁾

1) CNN(2021.2.19), "House Democrats unveil full \$1.9 trillion Covid relief bill with minimum wage increase", Retrieved on Feb.21.2021, <https://www.cnn.com/2021/02/19/politics/house-covid-minimum-wage-bill/index.html>



- 2) Reuters(2021.3.1), “Senate to debate COVID-19 bill this week after Democrats retreat on minimum wage”, Retrieved on Mar.2.2021,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usa-congress/spotlight-moves-to-u-s-senate-as-democrats-push-1-9-trillion-covid-19-relief-bill-idUSKCN2AT228?il=0>
- 3) New York Times(2021.3.7), “What’s in the Stimulus Bill? A Guide to Where the \$1.9 Trillion Is Going”, Retrieved on Mar.10.2021, <https://www.nytimes.com/2021/03/07/us/politics/whats-in-the-stimulus-bill.html>

미국 : 공화당 상원의원 롬니, 코튼 연방 최저임금 10달러 인상안 제안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미트 롬니(Mitt Romney)와 톰 코튼(Tom Cotton)이 2021년 2월 22일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시간당 10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¹⁾ 해당 제안에 따르면 2년 주기의 금액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인상 속도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고용주들이 “E-Verity”라 불리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자격 전자조회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사업주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있다. 공화당은 최

저임금 인상이 정부예산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며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줄이게 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롬니 의원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하며, 동시에 불법 이민의 주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E-Verity의 의무사용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지난 십여 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지만, 많은 주가 주별 최저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 현재 29개 주의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시간당 14달러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수당, 사회보장 혜택 그리고 의료보험과 같은 연계된 분야의 지출도 확대시킬 것이라 예상된다.

1) FOX(2021.2.23), “Romney, Cotton unveil plan to boost minimum wage to \$10 per hour,” Retrieved on Feb.23.2021, <https://www.foxbusiness.com/economy/romney-cotton-unveil-plan-to-boost-minimum-wage-to-10-per-hour>

미국 : 트럼프 전 대통령, 취업비자 제한 조치 3월 말까지 연장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완료되기 전에 취업비자 제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을 이유로 취업비자, 특히 취업비자 중 대표격인 H-1B 비자(전문직 취업비자) 등 거의 모든 비자 발급과 영주권 처리를 제한하고, 그 기간을 자신의 임기 기한을 넘어서는 3월 말까지로 연장해 놓았다.

여기에는 비자 발급을 제한하여 미국으로 입국하는 인원수를 줄이고 코로나19의 확산 자체를 막

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 미국 경제가 입은 타격에서 미국인 노동자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이는 현재 전 세계의 공학 인재를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 기업들의 요구와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IT 기업들의 인력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¹⁾ 현재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해당 취업비자 제한 조치가 조속히 풀리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취업비자 제한이 추가될지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1) Forbes(2021.1.1), Trump Ignores Jobs Data To Extend H-1B Visa And Immigration Bans, Retrieved on Feb.15.2021, <https://www.forbes.com/sites/stuartanderson/2021/01/01/trump-ignores-jobs-data-to-extend-h-1b-visa-and-immigration-bans/?sh=28f94b325821>

독일 : 독일의 2020년 실질임금 수준, 2019년에 비해 약 1% 하락

독일 연방통계청에서 발표한 분기별 소득에 관한 통계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2020년 연평균 명목임금지수는 2019년 평균에 비해 약 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명목임금지수는 상여금을 포함한 세전 총급여의 등락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동일한 기간 동안 독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5%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2020년 독일의 연평균 실질임금지수는 2019년에 비해 약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09년의 경제위

기 시에도 0.1% 하락하는 수준에 그쳤던 독일의 실질임금지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08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단축근로의 증가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명목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단축근로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지급된 지원금은 명목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 수치상으



<표 1> 독일의 실질/명목/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연도	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		
	실질임금지수	명목임금지수	소비자물가지수
2008	0.4	3.0	2.6
2009	-0.1	0.2	0.3
2010	1.4	2.6	1.1
2011	1.2	3.3	2.1
2012	0.5	2.5	2.0
2013	-0.1	1.4	1.4
2014	1.8	2.7	1.0
2015	2.1	2.7	0.5
2016	1.8	2.3	0.5
2017	1.0	2.5	1.5
2018	1.3	3.1	1.8
2019	1.2	2.6	1.4
2020	-1.0	-0.6	0.5

자료 :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

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에 비해 근로자가 받은 영향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0년 4/4분기의 통계를 포함한 2020년의 상세 및 최종 통계결과는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¹⁾

1) 연방통계청(BA) 보도자료(2021), "Reallöhne im Jahr 2020 um 1,0% gegenüber 2019 gesunken," 2021년 2월 17일 자,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1/02/PD21_070_623.html

독일 : 독일 연방정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3차 사회보장지원법안(Sozialschutz-Paket III)의 입법화 지원 결의

독일의 연방내각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제3차 사회보장지원법안(Sozialschutz-Paket III)의 입법절차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여기에는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에 대한 코로나 추가지원금을 비롯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정책을 규율할 법적인 조치가 포함되었다. 이 법안은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CDU/CSU)과 사민당(SPD)의 원내교섭단체를 통해 입법절차에 돌입하였으며, 2021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포함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2021년 5월 시점에
- ① 장기실업급여 또는 『사회법전』 제2권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 ② 『사회법전』 제12권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 또는 「망명신청자급여법(AsylbLG)」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
- ③ 「연방원호법(BVG)」에 따라 사회적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 급여로서 생계비 명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이에 해당하는 모든 성인에게 최대 150유로(약 20만 원)의 일회성 지원금이 지급된다. 만약 임시로 지급된 아동수당 및 자녀 보너스를 부모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법전』 제2권 및 제12권에 규정된 법정 생계비 3등급에 해당하는 성인 수급권자도 이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지속되는 한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간소화하는 조치를 연장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마련된 『사회법전』 제2권, 제12권, 「연방원호법(BVG)」 및 「연방아동수당법(BKGG)」의

특별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 휴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휴관 등으로 급식 및 공동 점심식사 제공이 중단됨에 따라 배달 비용을 포함한 점심식사 비용의 개별적 상환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법전』 제2권, 제12권 및 「연방원호법」의 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다.
- 사회복지사 및 복지시설들이 지속적으로 활동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사회법전』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자와 복지시설에 대한 공공부문의 각종 보장 및 지원 조치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 「예술가사회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의 경우, 2021년 연간 최소 필요소득인 3,900유로(약 529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회보험을 통한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¹⁾

1) 연방노동사회부(BMAS) 보도자료(2021), “Wir stärken den Sozialstaat in der Pandemie: Bundeskabinett beschließt Formulierungshilfe für das Sozialschutz-Paket III,” 2021년 2월 9일 자, <https://www.bmas.de/D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21/wir-staerken-den-sozialstaat-in-der-pandemie.html>

영국 : 대법원, ‘우버 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woker)’라고 판결

2021년 2월 19일 영국 대법원이 우버는 중개인일 뿐이라는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우버 기사의

법적 지위를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woker)¹⁾로 판결하였다. 그 이유로는 우버가 ① 요금을 정함으



로써 운전사의 소득을 통제하고, ② 계약조건을 결정함으로써 운전사는 이에 대한 발언권이 없으며, ③ 승차거부를 많이 하는 운전사를 처벌할 수 있는 등 승차요청을 통제하고, ④ 평점을 통해 운전사를 모니터링하고 반복되는 경고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우버 기사들은 우버에 종속되어 있으며, 그들이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우버 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이동할 때 뿐만 아니라, 우버앱을 켜는 순간부터 끄는 순간까지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다.²⁾

우버 측은 이번 판결이 2016년 소송 시작 당시 앱을 사용하던 소수의 운전사들에 대한 것이라면서 이후 사업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BBC 등은 이번 판결로 수천 명의 우버 기사가 최저임금과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게 될

수 있고, 나아가 깃(gig) 경제 전체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우버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도하였는데, 2019년 미 증시 상장 당시 제출한 자료에서 우버는 기사가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와 관련한 보상에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모델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며, 이로 인해 사업 및 재무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로 인해 영국 국세청(HMRC)이 우버를 운송사업자로 분류하게 될 경우 우버는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새로 부담하게 된다. 지난 2019년 우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필요하다며 사법심사를 요청한 바 있는 세금 전문 변호사 졸리언 몸(Jolyon Maugham QC)은 이번 판결로 인해 우버가 10억 파운드(약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거부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 1) 영국의 노동자 지위는 “employee”, “worker”, “self-employed”로 구분된다. “worker”는 “employee”에 비해 법적 보호 수준이 낮으며, 최저임금, 유급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다. employee와 worker는 각각 종업원, 임금근로자와 노동자, 노무제공자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여기에서는 worker를 노동자로 번역한다.
- 2) BBC(2021.2.19), “Uber drivers are workers not self-employed, Supreme Court rules,” <https://www.bbc.com/news/business-56123668>

영국 : 정부,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해진 성인 사회복지 분야 인력 모집에 나서

영국 정부가 요양원에 머물고 있거나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이 필요한 성인들을 도울 인력 모집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Care for Others. Make a Difference)”라는 캐치프레이즈를 TV 등을 통해 홍보하며 구인에 나섰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자가격리

등으로 최근 성인 사회복지 분야 인력의 결근율이 두 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이다.¹⁾

구직자나, 자원봉사자, 혹은 강제휴직 중인 노동자 등이 단기 인력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채용 후 사회복지 분야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 제공되기 때문에 관련 경력은 필요하지 않다. 단기 인력이 하게 되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수령하여 배달하는 것부터 세면이나 옷 입는 것, 혹은 청소나 요리를 돕는

것까지 다양하나, 구체적인 역할은 기존 경력이나 지방 정부의 필요 등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사회복지 분야에서 좀 더 장기간 근무하기 위한 일자리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채용된 인력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관련 수칙을 교육하고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필수노동자(key worker)와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²⁾

1) 영국 정부는 2021년 1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해진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확충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부를 돕기 위해 1억 2천만 파운드(약 1,800억 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 GOV.UK(2021.2.9), "Public urged to consider work in adult social care," <https://www.gov.uk/government/news/public-urged-to-consider-work-in-adult-social-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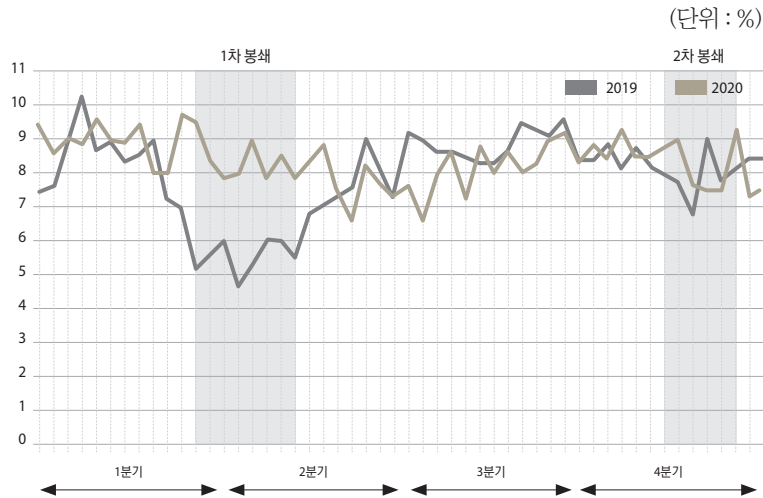
프랑스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이 줄어 2020년 말 실업률 수치 감소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통계청(INSEE)이 발표한 2020년 제4분기 실업률(ILO기준)은 3개월 만에 1.1%p(235만 명) 하락하여 마요트를 제외한 지역에서 8%(프랑스 본토의 경우 7.7%)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실업률이 감소한 것이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실업률 통계 정의에 따라 2주 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실업상태에서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거나, 실업상태지만 3개월 이내에 시작하는 직장을 찾아야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2차 봉쇄조치로 인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20년

가을 상당수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인구의 4.1% 또는 18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4분기 고용률의 경우 2분기 감소분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3분기와 같은 수준(0.6%p)으로 증가하여 65.6%를 기록했다. 하지만 근로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2020년 4분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한 사람의 21%가 실업상태이거나 불완전고용 상태였고 이는 2분기에 관측된 최고점보다 10.7%p 낮지만, 1년 전보다는 여전히 3.3%p 높은 수치이다.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의 고용률은 위기 이전 상황에 비해 0.7%p 낮은 7%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이르다고 볼 수 있다.¹⁾



ILO 정의에 따른 실업률 추이(2019, 2020)



자료 : 프랑스통계청(INSEE): Les Echos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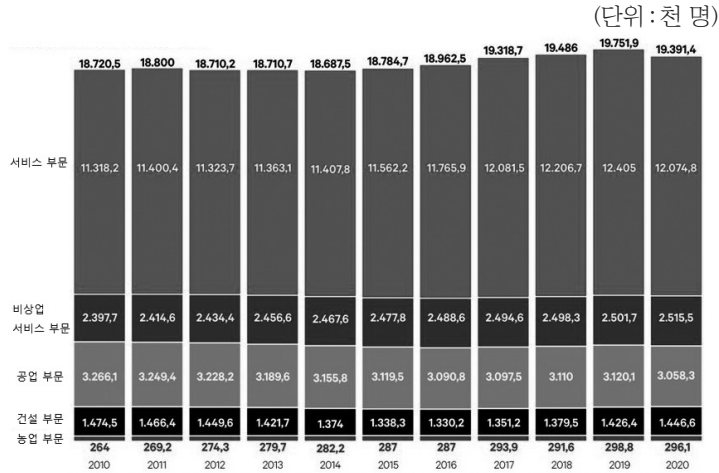
1) Les Echos(2020.2.16), Covid : baisse factice du chômage en fin d'année dernière,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covid-baisse-factice-du-taux-de-chomage-fin-2020-1290660>

프랑스 : 2020년 4분기 공업부문·서비스부문 일자리는 전년대비 크게 감소, 건설부문·비상업 서비스부문 일자리는 소폭 증가

2021년 2월 5일 프랑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민간부문 고용은 예상치보다 상향 조정되어 2020년 1.8% 하락(2020년 12월 중순 발표된 예상치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4분기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1월과 12월에 걸쳐 550만 명의 근로자가 최소 1시간이라도 부분실업제도(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단순해고하는 것을 막고 정부와 고용보험공단이 줄어든 근무시간

으로 인해 적어진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업 보조를 통해 보상하는 프로그램)를 신청하며 고용을 유지 하였던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4분기 민간부문 일자리는 보건위기와 2차 봉쇄조치의 영향하에서 예상치의 1/5 수준인 0.2% 감소(39,600개 순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업부문에서는 4분기에 1만 7,6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전년대비 6만 1,700개가 감소하며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부문별 고용 추이(2010~2020)



자료: 프랑통계청(INSEE): Les Echos 재인용.

했다. 서비스부문의 경우 4분기에만 8만 3,4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전년대비 약 29만 개가 감소하였으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일자리 감소가 발

생했다. 건설부문과 비상업 서비스부문의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전년대비 각각 20,000개, 14,000개 증가)했다.¹⁾

1) Les Echos(2020.2.5), L'emploi salarié limite la casse face au Covid,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emploi-salarie-la-france-limite-les-degats-face-au-covid-1287779#:~:text=En%20nombre%20de%20destructions%20d,publiant%20des%20chiffres%20encore%20provisoires>

일본: 2020년 10월말 외국인 노동자 수 역대 최대치 기록

2021년 1월 29일 후생노동성은 2020년 10월 말 현재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172만 4,328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9.6%p 감소한 4.0%로, 신형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

별로 보면 의료·복지가 26.8%, 건설업이 19% 증가하였으며, 숙박업·식음료서비스업은 1.8% 감소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44만 3,9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국적이 41만 9,431명, 필리핀 국적이 18만 4,750명이었다.¹⁾



1) NHK(2021.2.4), “外国人労働者 172万人と最多 宿泊業・飲食業では減少”, <https://www3.nhk.or.jp/news/html/20210204/k10012848731000.html>

일본 : 후생노동성 산하 기구인 헬로워크 상담원, 계약 해지 위기

후생노동성에서 실업자의 구직을 위해 설치한 기구인 헬로워크(ハローワーク, 공공직업안정소)의 상담원 1만 명 이상이 계약 해지를 앞두고 항의에 나섰다. 전국의 헬로워크 직원은 2만 7천 명으로, 전체 직원의 70%가 비정규직이다. 3년마다 공모채용을 통해 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 헬로워크 상담원 1만 명 이상이 이번에 계약 해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 상담사는 “실업자가 될 불안을 안고 실

업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상담기술은 물론이고 노동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역 사정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상담원을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담원들은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만 2천 명의 서명을 인사원에 제출했다.¹⁾

1) 朝日新聞(2021.2.16), “ハローワーク相談員、実は自分も失職危機…国に改善要請”,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P2H7291P2HULFA02B.html>

일본 : 코로나19 환자 수용 병원의 노동자 처우 악화

일본병원회, 전일본병원협회, 일본의사법인협회 등 3개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를 받아들인 병원의 40% 이상이 겨울 상여금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전국 4,4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1,475개 병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답변한 병원들 중 38.1%가 상여금을 “감액했다”고 했으며 0.3%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제대로 지급했다”는 병원은 60.7%였다. 이 중 코

로나19 환자를 받아들인 614개 병원만을 보면 “감액했다”는 43.3%, “지급하지 않았다”는 0.2%, “제대로 지급했다”는 응답은 56.0%였다.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노동자 처우가 다른 병원에 비해 더 악화된 것이다. 한편, 2020년 4월~12월 사이 전체 병원의 이익률은 전년에 비해 1.0% 줄어든 평균 -5.6%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코로나19 환자를 받아들인 병원의 이익률은 평균 -6.5%로 적자폭이 훨씬 컸다.¹⁾

1) 朝日新聞(2021.2.16), “4割が冬の賞与カット コロナ受け入れ病院、待遇は悪化”,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P2J5CPZP2JUTFL00B.html>

중국 : 중국의 노동시장 다원화 현황

최근 중국의 인적자원 서비스업체 치엔통후리엔(乾通互聯)은 「2020년 중국의 노동시장 다원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해 현재 고용형태가 다변화된 산업의 발전 상황에 대해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했다.¹⁾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51%의 기업이 고용의 다변화가 기업경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산업과 문화/과학연구/교육/훈련 산업, 서비스업이 고용 다변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3대 산업이었다.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경제의 발전으로 고용 다변화 모델은 더이상 노동집약형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식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정상화 기간 동안 기업들은 고용 다변화 모델을 통해 지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치엔통후리엔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다변화 모델을 채택하는 이유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66%의 기업이 인건비 절감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답했다.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40%의 기업이 다원화된 노동관계 중에서도 외주와 파견근로를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어서 이 두 모델이 현재 노동시장 다원화의 주요 모델이 되었다. 그리고 기업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이 고용 다변화의 주요 주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코로나19는 이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용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은 기업 규모로는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과 10인 이상~100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업 성격으로는 민영기업이 77%를 차지했다. 한편 고용 다변화 모델에 대한 기업의 우려도 존재하는데, △ 기업 내부 데이터 유출 및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 △ 노동자의 자질 및 고용 효과에 대한 우려 △ 다변화 모델로 고용된 노동자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만큼 일에 전념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 中國經濟網(2021.1.12), 「《2020中國多元化勞動關係市場研報》發布 超半數企業認可多元化用工重要性」, http://tech.ce.cn/cjzx/202101/12/t20210112_36215014.shtml



중국 : 2020년 중국의 성(性)평등 10대 뉴스

중국에서 2020년 성평등 10대 뉴스가 발표되었는데,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세계여성대회 25주년 기념 유엔 총회 고위급회의에서 전 세계 여성사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네 가지 제안 발표²⁾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021년부터 시행하는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서 남녀평등이라는 기본 국가정책을 유지하고 여성과 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을 건의 △의료인을 비롯한 각계 여성들이 코로나19 방역 사업에서 많은 사람을 구했으며 성실히 직책을 수행해 빛나는 성취를 획득 △중국 최초로 발표된 민법전이 남녀평등의 헌법 원칙과 기본적인 국가정책을 전면적으로 구현 △최고인민검찰원과 전국여성연합회가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 △중국 여성개발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보고에 따르면 여성이 마을주민위원회 주임의 12%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해 프로그램 목표를 조기 달성 △중국 평화유지군 중 여군이 유엔 군사 성평등 리더의 영예를 최초로 획득 △장시성(江西省)에서 전국 최초로 여성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을 시행 △산둥성(山東省)에서 전국

최초로 성(省)급 인민대표대회가 발표한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성평등 평가 시스템을 마련 △성별 고정 관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광범위한 대중의 관심을 촉발 등 이상 열 개의 뉴스가 선정되었다. 마지막 뉴스와 관련해 2020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한 출판사가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른 내용으로 수학 참고서를 출판하였고, 논란 끝에 결국 참고서가 회수되는 일이 있었다. 또 일부 대학의 교내 안전수첩에서 성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여성의 외모, 성격, 옷차림 등을 명시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일도 있었다. 이는 결국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수정될 예정에 있다.

2012년 처음 시작해 2020년까지 매년 발표된 ‘성평등 10대 뉴스’는 중국여성신문이 중국사회과학원 언론커뮤니케이션연구소(新聞與傳播研究所), 중국여성발전재단 여성언론문화기금과 공동으로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인민일보, 신화사, 광명일보, 경제일보, 공인일보, 농민일보, 법제일보 등의 중앙 언론 매체 종사자와 일부 미디어 및 젠더 연구 전문가로 구성된다.

1) 澎湃(2021.2.10), 「反性別刻板印象受廣泛關注, 2020性別平等十大新聞事件揭曉」,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1305080

2) 여기서 말하는 ‘여성사업’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없애고 여성 빈곤 문제를 해결하며,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네 가지 제안은 첫째, 여성들이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 둘째, 성평등 실천, 셋째, 여성들이 앞장서는 시대, 넷째, 여성사업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이다.

브라질 : 2020년 임시직 고용 빠르게 증가

최근 브라질 임시직 노동 협회(Associação Brasileira do Trabalho Temporário: Asserttem)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임시직 노동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9년에 비해 3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브라질 경제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고용·실업 동향 자료(Cadastro Geral de Empregados e Desempregados : Caged)를 참고해 임시직 종사자 수를 집계했다. 브라질의 임시직 고용은 정규직 노동자를 임시로 대체하거나 기업의 업무량이 급증했을 때 최대 9개월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특정 업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노동자의 계약기간은 최대 2년이다. 임시직 고용형태의 중요한 특징은, 계약기간이 2년을 넘기면 정규직 노동자로 자동 전환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받는다라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과 동일하게 휴식·휴가,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만 해고 사전 통지나 연말 보너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 시 부과되는 벌금, 임신·출산 휴가, 실업보험 등은 적용받지 못한다.

브라질의 임시직 고용은 한국의 파견노동 형태와

매우 비슷하며 주로 노동자는 중개업체를 통해 고용되기 때문에 3자 계약관계(원청 - 중개업체 - 임시직 노동자)가 형성되었을 때 법적으로 유효하다. 브라질에서는 임시직 고용을 규율하는 법률(Lei nº 6.019)이 1974년에 처음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기업의 활용 비중이 높지 않았고, 임시직 노동자는 노동법에 따라 일부 권리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비공식 고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좋다는 인식이 높았다. 그러나 2017년 미셸 테메르(Michel Temer) 정부가 추진한 아웃소싱법에 따라 외부 인력 사용이 쉬워지면서 임시직 유형도 매우 복잡해졌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이 정규직보다 임시직 고용을 선호하다 보니 임시직을 ‘불안정 노동’의 한 유형으로 재인식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유니캄피대학(Unicamp)의 마릴라니 테이세이라(Marilane Teixeira) 경제학 교수는 “노동 개혁 이후 이러한 유형의 고용 증가는 이미 예상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임시직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만약 경제위기가 더 오래 지속될 경우 비용 절감을 원하는 기업의 일반적 고용 관행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¹⁾

1) CUT(2021.1.26), “Na pandemia cresce 35% a contratação de trabalhador sem direitos,” <https://www.cut.org.br/noticias/na-pandemia-cresce-35-a-contratacao-de-trabalhador-sem-direitos-b989>



브라질 : 코로나19 통제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고용 상황도 상대적으로 양호

브라질 국책연구기관인 응용경제연구소(Instituto de Pesquisa Econômica Aplicada : Ipea) 마르코스 헤셔(Marcos Hecksher)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노동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3분기 기준 브라질 및 OECD 회원 20여 개 국가의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10만 명당 사망률과 일자리 축소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브라질은 칠레, 콜롬비아에 이어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큰 악영향을 받은 반면 일본, 호주, 한국, 뉴질랜드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적은 나라에 상대적으로 일자리 유지율이 높았고 실업률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헤셔는 이들 나라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유지했다”며, 방역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도 침체되고

일자리도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언급하면서, 브라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24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 코로나19 확진자는 1천만 명이 넘었다며 이처럼 코로나19 위험이 크다 보니 “브라질의 일자리 하락 수준이 분석 대상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2020년 10월 기준 3분기 실업률이 14.3%, 실업자는 1천 41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정규직 일자리의 감소폭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헤셔는 브라질은 앞으로 1년 이내 노동시장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백신 접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대책인 긴급지원 재개 등의 공공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 myNews(2021.1.20), “Países que controlaram a pandemia salvaram mais empregos, aponta economista do Ipea,” <https://canalmynews.com.br/economia/menos-vidas-menos-empregos-paises-que-controlaram-a-pandemia-salvaram-mais-empregos/>